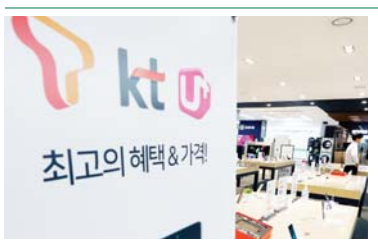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564호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산업]
SKT-LG U+
신사업·5G 양날개
3분기 깜짝 실적
06

코스피 2413.79 (+56.47)
코스닥 844.80 (+17.83)
금리(국고채 3년) 0.927 (-0.028)
환율(원·달러) 1128.20 (-9.50) 〈5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논란

블랙컨슈머 난립 우려 中企 10곳중 7곳 반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놓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통해 집단소송제를 기존 증권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키로 할 예정이어서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이 쉽지 않은데, 집단소송까지 불거질 경우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이번 제도를 악용해 블랙컨슈머가 판을 치고, 합의금을 노린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경우 자칫 기업 생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위한 제도
자칫하면 기업 경영에 치명타

중기중앙회, 中企 500곳 조사
68.6%가 '확대 도입' 반대
"블랙컨슈머·기획소송 가능성"

이같은 악영향은 사내에 법무팀이나 변호사 등 법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은 31.4%였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92.2%는 자체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어 집단소송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이면서다.

응답기업의 4%가 관련 소송을 경험한 가운데, 이들 가운데 85%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반대했다. 업종 중에선 '완구 및 기타 소비재' 분야의 중소기업의 반대(74.6%)가 가장 많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해야 하는 중요 시기인데,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온라인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관련 제도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론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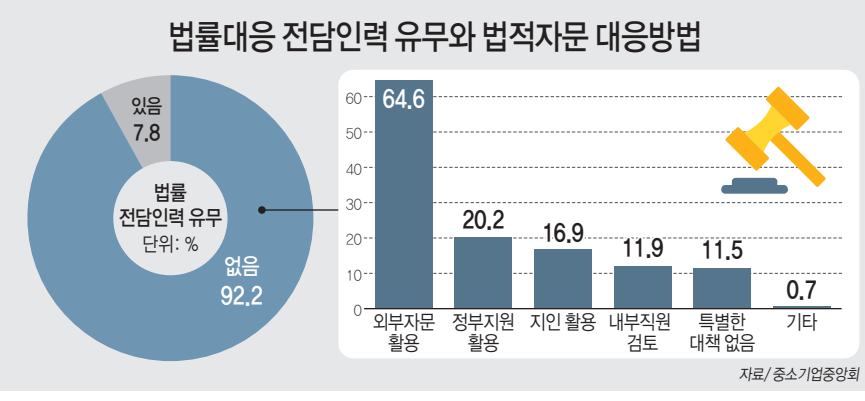
그러면서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이를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집단소송제 관련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를 꼽았다. '합의금이나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우려도 컸다. 이외에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는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집단소송법(안)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소송 남발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자신의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으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11·3 대선의 주요 승부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면서 대선 고지 9부 능선에 올라섰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권고지 눈앞… 트럼프 소송 준비

11·3 미국 대선

바이든 264명 VS 트럼프 214명
네바다주 개표결과 결정적 영향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 개표가 5일(현지 시각) 현재 막판을 향하고 있다. 주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64명으로 집계됐다.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2·3면〉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 즉 매직넘버는 270이다. 먼저 미국 대선 향방을 가를 6대 경합지역인 러스트 벨트(펜실베이나·미시간·위스콘신주)와 선벨트(플로리다·노스캐롤라니아·애리조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미국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미시간·위스콘신주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플로리다·노스캐롤라니아주 등에서 바이든 후보보다 앞서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인단 6명이 걸린 네바다주 개표 결과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 시간) 남은 경합 지역은 펜실베이니아(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선거인단 수가 적은 네바다주 한 곳만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도 매직넘버 270을 달성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5일(현지 시각) 현재 개표율이 86%인 네바다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9.3%(58만8252명)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48.7%, 58만605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다만 네바다주 선거 당국이 개표 결과 업데이트를 현지 시각 5일 오전 9시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최종 결과는 다소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3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월세대란 오나

9월 서울 월세 거래비중 증가
증세 부담에 월세 선호 가능성

정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덜한 월세로 수요가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시작된 전세품귀 현상에 더해 이제는 월세대란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 가지 행정 업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표준주택) 53.6%, 토지(표준지) 65.5%로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두 90%가 된다.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와 시점은 부동산 가격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연간 3%포인트(p)씩 현실화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상향은 최대 6%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세금 부담이 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부동산 수요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의 월세 거래 비중은 5월 26.9%에서 9월 30.4%로 높아졌다. 최근까지 나타났던 정부의 증세 분위기로 세 부담이 덜한 월세로 전환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 일종의 현금 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증부 월세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은 상승세다. 세금부담이 큰 강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역삼래미안(전용면적 59.73㎡)은 지난달 보증금 3억원, 월세 140만원에 계약됐다. 이 면적형은 9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8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한 달 새 보증금이 2억원이 올랐다.

역삼자이(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보증금 6억원, 월세 250만원에 계약됐다. 이 면적형의 경우 전달 보증금 5억5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새 보증금은 5000만원, 월세는 80만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대치동 삼성래미안(전용면적 97.35㎡)이 보증금 14억원, 월세 90만원, 청담자이(전용면적 49.59㎡)가 보증금 5억원, 월세 230만원에 나오는 등 비교적 신축 아파트에서 물건이 나오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2% 상승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